

첫 단추 잘못 꿰어진 대학구조개혁

지병문 | 전남대학교 총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요즘 대학교육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정원 감축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즉 입학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어 2016년부터는 입학정원에 비해 고교 졸업자 수가 더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23년

쯤엔 부족한 입학자원이 16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구조개혁안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뉘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학 특성화사업도 정원감축과 연계되어 있다. 사업비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할 때 정원감축 규모에 따라 3~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재정지원을 고리로 정원감축을 강제하고 있다.

일단은 정부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 4월 특성화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내놓았다. 한 푼이 아쉬운 대학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사정이 더 절박한 지방대학들은 가산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0% 안팎의 높은 감축률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원을 줄여 가면 정부가 원하는 16만 명 감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으로 정부의 구조개혁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몸집을 줄였을지는 몰라도 구조개혁의 참뜻과는 거리가 멀다.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강화이고 정원감축은 결과여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개혁은 본말이 뒤바뀌었다.



특성화사업만 해도 그렇다. 정원감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미끼로 삼은 것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사업비를 더 타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정원감축이 경쟁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7.2명이다. 이는 OECD 평균 15.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글로벌 명문인 하버드대와 도쿄대, 칭화대 등은 10명이 채 안된다.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도 서울대(14명), 성균관대(18.4명), 연세대(19명) 등이 20명 미만으로 OECD 평균에 비교적 가깝다. 명문대일수록 교수 한 명이 가르치는 학생 수가 적다. 그래야 더 잘 가르칠 수 있고, 대학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원을 늘리든지, 학생 수를 줄이면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굳이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아도 2023년 쯤엔 입학정원 16만 명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학생 수도 64만 명이 감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대학 구조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학생 충원을 못해 존립이 어려운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온갖 부정·비리의 온상인 부실 사립대학들을 도태시키면 구조조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뤄진다. 이것

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구조개혁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이 오히려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대학들도 교육부 요구대로 정원감축 계획을 내놓으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지원금이 부실대학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산소마스크’ 구실을 할 수도 있다. 백 번 양보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정원감축은 곤란하다. 올바른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왜곡된 고등교육시장을 바로잡는 것도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대 비중은 80%로 국립이 대세인 선진국과는 정반대다. ‘기초학문 보호, 고른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등교육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립대 비중을 늘려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구조개혁 안에는 국립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내용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의 첫 단추는 부실대학 퇴출이고, 마지막 단추는 경쟁력 강화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투자’가 가장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통일문제연구소장,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추진위원, 2013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2012년 12월 4년 임기의 전남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학교를 이끌고 있으며, 올 3월부터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